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을 위한 전국 확산 추진

-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차 공모 접수(8.18.~8.29.)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년 전국에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8월 2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 '23.7월부터 실시, 131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본사업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며,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030)
		담당자	팀 장	박준형 (044-202-3040)
			사무관	이종범 (044-202-3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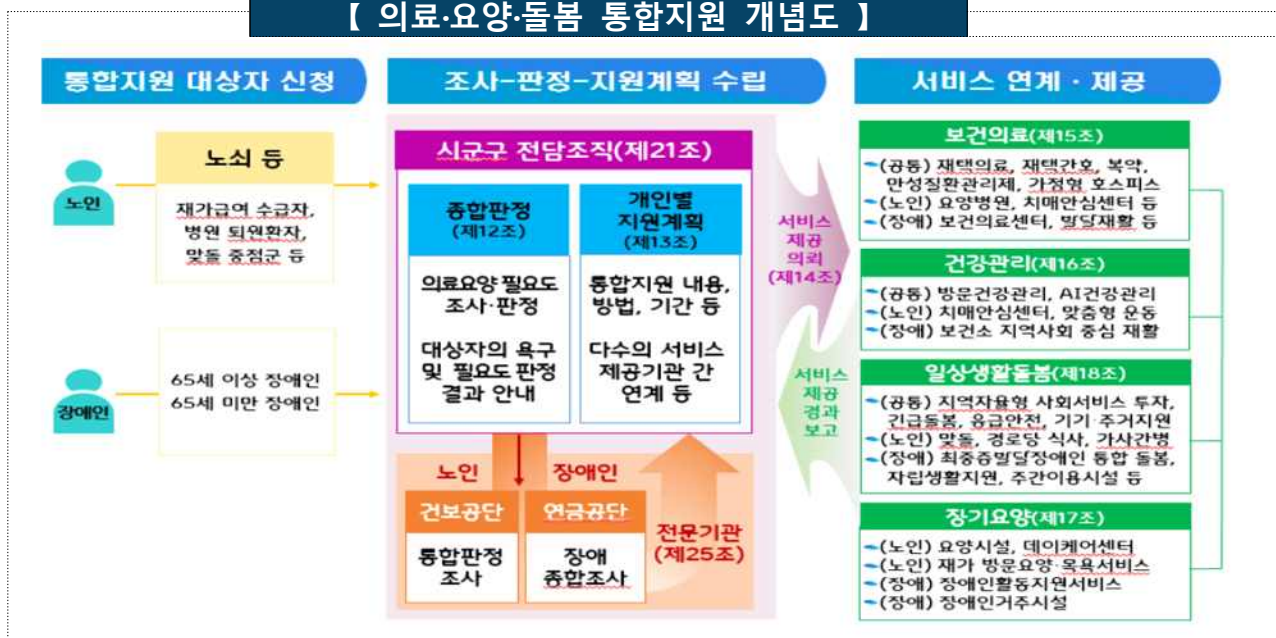


1 통합지원 제도 개요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24.3월 제정)
→ 現 시범사업(131개 지자체) → **26.3월 법 시행, 전국 적용**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내용)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 (지원절차) 통합지원 ①신청 → ②조사 → ③판정 → ④지원계획 수립 → ⑤통합지원 제공 → ⑥모니터링
- (기반조성) 통합지원 절차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 전담조직에서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통합지원 절차 운영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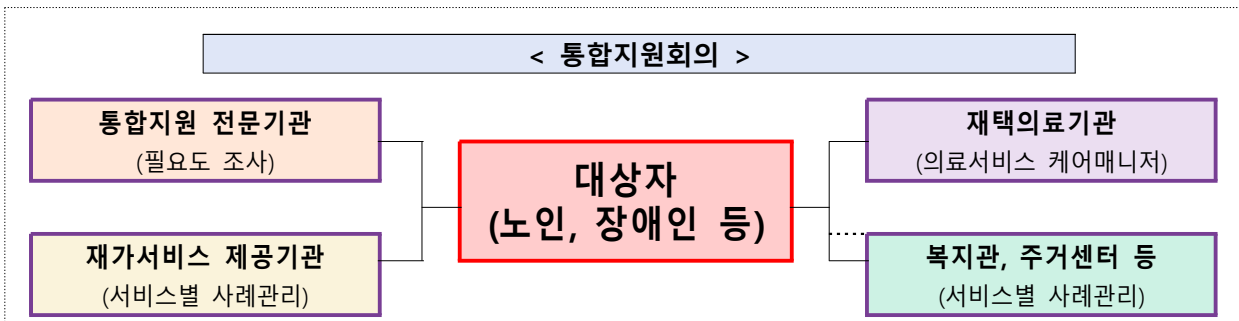


2

사업 절차

- ① (신청)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 센터, 건보공단 등에서 신청가능 구조로 전환하여 접근성 제고
 - 대상자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읍면동)에 신청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 ② (조사·판정)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조사 체계를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 * 노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국민연금공단)
 - (노인) 읍면동·건보 지사에서 사전평가를 실시 → 통합판정을 활용하여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면밀히 파악 → 적정 서비스군 판정
 - (65세미만장애인) 장애인 종합판정조사*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 조사항목별 평가척도를 통한 서비스 필요도 결정(연금공단)
 - * 보완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활용하여 의료, 건강 등 욕구 확인
 - ** 다만, 65세미만 장애인 통합지원은 지자체와 별도 협의 후 사업진행 예정
- ③ (계획수립·제공)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제공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의 운영 (시군구, 읍면동,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 (역할) 시군구(읍면동)가 마련한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종결
 - (계획 승인) 조사 결과·서비스 적합성 논의, 사례회의 등 보완 후 확정
 - (변경·종결) 욕구·상태 변화 확인, 서비스 부적합 시 변경·종결 검토 후 확정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 수립 >



- ④ (모니터링) 제공기관별 계획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및 중단사유가 발생시 종결 실시
 - * (종결 사유 예시) ①사망, ②병원 입원, ③시설 입소, ④중단의사, ⑤욕구 충족

□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119개 시·군·구)

- (추진배경·목표) 전국 확대 前, 경험과 추진 의지 높은 자체 추진 지자체를 우선 지원(비예산)하여, 표준모델 제공 및 방향성 제시
- (기간·규모) '25.1~ , 35개소 / '25.5~ , 53개소 / '25.6~ , 31개소

서울(16) 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금천·관악·송파·강동, 부산(11) 중구·서구·동구·동래·남구·해운대·사하·금정·강서·수영·사상, 대구(4) 서구·달서·달성·군위, 인천(2) 부평·계양, 광주(3) 동구·남구·광산, 대전(3) 동구·중구·서구, 울산(5)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 세종(1) 세종, 경기(18)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남양주·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광명·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 강원(8) 춘천·원주·강릉·태백·속초·홍천·횡성·고성, 충북(10) 청주·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음성·단양, 충남(5) 아산·논산·부여·청양·태안, 전북(6)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 전남(16) 나주·광양·담양·고흥·보성·화순·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경북(5) 포항·경주·고령·성주·칠곡, 경남(5) 창원·진주·거제·창녕·남해, 제주(1) 제주

- (지원내용)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견보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중점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전달체계 등은 예산지원형과 동일

<예산지원형 및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특성>

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	지역 내 노인 대상, 의료·돌봄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50% 매칭)
기술지원형 (119개 시군구)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유관 사업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 간접 지원

□ 기술지원형 지자체 우수사례(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초고령사회 선도적 대응을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본사업 대비 통합지원 전담팀 구성 및 빅데이터(견보공단)로 돌봄필요자 발굴·돌봄매니저를 통한 지역안전망 형성 등 민·관 협업 촉진
-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강원도 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을 통해 노인과 고위험군(치매노인,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 지역병원(대성병원)과 협약체결 및 재택의료센터 확보로 다학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팀이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4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2025년 131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중, 20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필요
 - 민·관 협력 인프라 마련, 표준모델 프로세스 경험 축적 등 지자체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지원
 - 기존 노인 외 65세 미만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시범사업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주요 내용

- (추가공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규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
- (지원내용)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 (교육)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합동 컨설팅으로 사업방향 설정, 실행계획서 작성 등 지원
 - (협업체계) 통합지원 협업 인력 배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 지원
 - *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 사업은 '26년 시스템 개선 시까지 수기 관리
 - (조사판정) 본사업에서 활용될 종합판정 체계 구축 및 시범 적용

□ 추진일정

- 시범사업 공모(8.18~29) → 참여 지자체 선정(9월초) → 지자체 교육(9월) → 전담조직 구성 등 지자체 사업준비(9~10월) →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제공(10월~) → 본사업 시행('26.3.27.)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